

진흥회 활동

통상산업부 차관 초청 전자업계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3월 21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통상산업부 박운서 차관 초청 전자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반도체산업협회 김치락 상근부회장, 업계대표 30명이 참석, 최근 전자산업 동향과 주요 현안 문제를 논의 했다.

동 간담회에서는 최근의 엔화강세와 원화절상 추세가 우리나라 전자산업 및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업체의 대응방안을 토의 하였으며 업계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민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했다.

전자업계가 견의한 주요사항은 국내업체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하여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축소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가전제품에 대한 고율의 특별소비세가 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견의하기도 했다.

또한 전자분야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사항을 조속히 폐지, 또는 완화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한편 박운서 통상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대일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해 온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고 밝히고 「10년이상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보호를 받았거나 독과점해온 품목,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제품 중 60%이상을 수출하거나 5년이상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보호를 받아 온 제품은 대부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여부와 대일 무역역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우선 순위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품목이나 품목수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수입선다변화 제도와 관련, 「일본측이 WTO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가 매우 불리하다」면서 「오는 6월말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4개년 계획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FDD · LBP 등을 비롯한 상당수

전자·전기제품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조기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해제는 유통 시장 개방과도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이 대일본상표 인지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운서 차관은 또 「오는 2000년부터는 세계시장이 국경없는 완전경쟁체제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전자제품중에서도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주력종목만을 집중 육성할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업계의 가전제품 특소세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부과대상품목과 특소세율 인하, 탄력세율 또는 잠정세율 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TO 출범에 따른 미국 특허법의 변화」 국제 특허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3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 및 관련기관 등에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WTO 출범에 따른 미국 특허법의 변화를 주제로 국제 특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피네간 헨더슨, 미국 특허전문 법률 사무소의 케네스 폐인, 래리 오르크, 데니스 오라일리, 찰스 반론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와 신신법률사무소의 선우찬호 변호사 등 5명이 참석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미국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발명에 대해서도 발명발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새로 개정된 20년 특허유효기간제도 및 특허출원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WTO가 미국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기업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 5개 주제가 발표됐다. <자세한 내용은 21 page 참조>

「95년도 해외투자협의회 연례회 개최」

본회 해외투자 협의회는 지난 3월 3일 만보성에서 연례회를 개최하고 전자산업 세계화 전략 포럼, 전자산업 해외투자 전략 세미나, 해외투자 현황 조사 분석, 해외투자 조사단 파견, 미주지역 투자조사단 파견 등을 골자로 한 '9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일정밀 정강환 사장 등 18명이 참석, 해외투자의 애로사항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해외투자시 애로사항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해외진출과 관련 투자안내, 투자법령 등 해당국가의 자료 입수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동 협의회가 자료를 입수, 회원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선임에서는 회장에 태일정밀 정강환 사장, 감사에 보성화림 임홍규 사장, 미주분과 위원장에 삼성전자 이재경 상무, 구주분과위원장에

해태전자 허진호 전무, 북방분과위원장에 LG전자 조기송 상무, 동남아 분과 위원장에 대우전자 김충훈 이사, 중국분과 위원장에 유양정보통신 한의현 부사장이 선임됐다.



인도 가전협회 본회 방문

본회는 지난 3월 18일 본회 회장실에서 인도 가전협회 K. S. Paman씨 등 8명의 예방을 받고 한·인도간 전자산업 협력 방안과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본회 이우종 이사는 한국전자 산업의 현황과 한국전자산업의 성장전략, 칼라 TV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인도 가전협회 방문단은 한·인도간 전자산업 부문에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자의료기기 업계 행정규제 완화 건의

본회의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회장 한원국)에서는 지난 3월 20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전자 의료기기 업계의 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에 건의 했다.

건의내용은 임상시험관련과 제조업 허가시 시설 및 기구 지정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중점으로 건의 하였으며 주요 요점으로는 현재 의료기기업체가 품목허가시 필수적으로 임상시험을 해야 하나 기존의 임상시험기관(3차 진료소 및 대학부속병원)에서는 업계가 의뢰하기가 매우 힘들고 대부분 신약 등을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협의회에서는 현재 약사법에 의거 임상시험을 하되 인체와 장기간 접촉치 아니하는 기기 등은 임상시험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단순 디자인 변경과 전기소자 및 기구소자 등이 추가 또는 삭제되어도 효능, 효과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기기 등은 임상시험을 면제토록 요청했다.

의료기기업체가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하여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계가 다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제조업 허가시 시설기준은 선반, 볼반, 그라인더, 프레스 등을 갖추어야만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외장기구를 제작하는 전문 금형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등이며 의료기기가 첨단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은 첨단화가 되지 않고 있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중심으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료기기 업계 수출 배가 대책 추진

본회의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회장 한원국)

는 최근 국제협력기금지원 등을 통한 수출배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초음파영상진단기, X-선장치,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등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의학과 전자공학이 결합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여건에 이상적으로 부합되는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IBRD 등 외국의 차관산업으로 선진국들의 장비를 수입해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전자의료기기가 선진국으로부터 인정받아 수출이 크게 증가되면서 국내 대학병원들의 인식이 달라져 내수공급도 확대되기 시작해 전자공업진흥회 내에 전자의료기기산업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첨단산업으로서 기틀을 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는 그동안 업계공동으로 “한국의 전자의료기기”라는 카다로그를 제작해 안으로는 국내 수요기관인 병원측과 협조해 구매계획조사, 의사들의 공장방문 주선 등을 통해 내수증대와 세계 유명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 공동참가를 통해 수출시장에 주력해 옴으로서 그 결과 전년대비 43% 늘어난 5,800만불을 달성했다.

“가전업계 환경 및 재활용 사전평가 심의결과 설계, 생산단계부터 감량화 및 재활용 용이화의 ‘가시적 성과’ 보여

본회는 지난 3월 9일 가전제품 재활용 사전평가심의회(위원장 도갑수교수)를 개최하고 지난 1년동안 기업이 환경 및 재활용사전평가를 시행해 온 데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부품수감소, 포장완충재 축소 등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재활용을 위해 플라스틱류의 재질표시 등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제도는 재활용촉진법에 근거한 “제1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제1종지정제품(TV, 냉장고, 세탁기)을 대상으로 모두 23개의 모델을 샘플로, 제품감량화, 재활용 용이화 구조개선 등 15개 항목별로, 학계, 연구소 등의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점검하였다.

동 평가는 가전업계가 종전 모델과 비교하여 신제품 설계, 개발시 자체 사전평가한 결과를 사업자단체(전자진흥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환경부, 통상산업부에 제출키로 되어 있다. 동 제도를 통해 가전업계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평가결과 중량 및 부피는 기존모델보다 0.9%에서 최고 11.9%까지 감량 또는 축소되었고 소형화를 위한 부품수 감소율은 평균 13개, 재활용을 위한 합성수지부품의 재질표시는 약 98%에 이르고 포장재 및 포장완충재 감량률은 4.3%에서부터 30.5%까지 제고 되었다.

그러나 가전업계는 아직 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공급되는 예가 많지 않았다는 점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제공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진흥회를 통해 재활용 업계에 제공하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예가 없어 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CTV는 6개 모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제품에 비해 중량은 3.4% 감소, 부피는 11.9% 감소, 그리고 부품삭감수는 12개, 재활용 용이화를 위한 합성수지 부품에 대한 재질표시는 12개 품목에 대해 약 99%를 시행중이며, 아울러 포장재 축소율과 포장완충재 감량률이 9.6%와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고는 8개모델을 대상으로 심의한 바에 의하면, 중량 및 부피감소율이 2.1%와 0.9%, 감소된부품은 11개, 재질표시 합성재질부품은 38

개 품목기준으로 96%가 표기하였고 포장재 및 포장완충재는 4.3%와 5.4%로 감량되었다.

세탁기는 9개모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량과 부피는 각각 2.3%, 3.0% 감소 부품삭감 수는 14개, 합성수지부품 재질표시는 100%, 또 한 포장재 및 포장완충재 감량률이 6.4%, 11.0 %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상품개발에 투자를 확대해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여실히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전자업계 애로 건의

본회는 지난 3월 29일 국내 전자업계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동, 알루미늄, 납, 레진, 골판지 등의 기초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통상산업부에 건의했다.

동 건의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전년 1월보다 동은 66.7%, 알루미늄은 75.3%, 납은 36.1%, 골판지는 81.6%가 상승하였고 레진은 무려 118 %나 상승하였으나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소부품업계는 엔고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에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애로가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전자업계는 셋트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가격경쟁력의 확보 및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차원에서 제조 원가에 반영시키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실제로 전자업계는 지난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2차례의 가격인하를 단행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 엔고 및 원화 절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 부품업계는 자금이 부족하고 영세한 관계로 원자재가격 상승은 곧바로 제품가에 반영시키기 힘든 상황인데 중국 등 저임금 국가

와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에다 엔고에 따른 수입 부품가격의 상승 및 국내 생산업체의 가격인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자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현행 5 ~8%인 원자재의 관세율을 영세율화하여 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레진, 규소강판 등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셋트가격 등 국내의 물가 안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레진의 경우 지난해 2~3차례의 가격인상에다 연초 다시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감안하여 레진업계의 가격인상 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공급량이 절대부족인 수출용 포장재와 철판의 공급확대를 위해 대체상품개발, 예비물량 확보 등 정부로부터의 대폭적인 지원과 국내 공급업체인 포항제철의 국내 수급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가통신설비 활용법의 확대 건의

본회는 지난 3월 16일 삼성전자 괴병원 부장 등 10명이 참석 회의를 개최하고 통상산업부, 행정부통신 위원회에 자가통신 설비의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임대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동 건의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 부가통신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통신회선 임대를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으므로 부가통신사업 관련기기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광통신장비 발전 등으로 여유가 생기는 자가통신설비를 부가통신사업자에 임대함으로서 국가통신 설비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통신회선 임대에 있어서의 경쟁 유발로 부가통신 사업과 관련기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다.

정보화 투자 촉진 방안 수립

본회는 지난 3월 16일 정보산업의 행정규제완화로 민간기업에 투자를 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화 투자 촉진방안을 수립, 정부에 보고했다.

동 내용은 통신사업에 대한 진입이 허가로 되어 있어 참여가 제한 돼 있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5조 등을 들어 진입규제 개선과 일반전화 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 등 투자제한성이 있는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정보화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세제감면으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규제 완화로 정보통신 산업의 활력을 증대 시킬 수 있게 됐다.

전자부품 산업협의회

지난 3월 23일 동 협의회는 상의빌딩에서 오리온전기 염길용 사장 등 20명이 참석 회의를 개최하고 부품업계 현안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가격 안정화는 관세율 인하와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F BT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동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세라믹 저항기 표준화 규격 제정, 차기 모델 표준화 규격 등을

협의 했다.

극선관 기술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규격서 개정 및 제정 등 EDEREC/EIAJ와 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가전 산업협의회

H A 표준화 분과 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동회의를 개최하고 각 회원사별 개발내용 검증 및 종합테스트 일정 등을 협의했다.

가 전제품 유통질서 관련회의를 지난 3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무자료 거래 균절대책 등을 협의했다.

CATV 기기 산업협의회

동 협의회(회장 : 삼성전기(주) 이형도 사장)는 지난 3월 17일 무역클럽에서 동양텔레콤 배석채 사장 등 30명이 참석 연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CATV기기 사업 발전 방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95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CATV국산 기자재 사용 방송업체 조사후 포상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임기가 만료된 신임 회장에 삼성전기(주) 이형도 사장이 선임됐다.